

건축도시 정책동향

vol. 92

2024. 04

건축·도시
AURI POLICY UPDATES

2024년도 건축·도시분야
중앙부처 업무계획



건축도시정책동향 Vol. 92

발 행 : 건축공간연구원(auri)
발행인 : 이 영 범
발행일 : 2024년 4월 30일
I S S N : 2635-5140
기 획 : 건축·도시정책정보센터
주 소 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, 8층
연락처 : 044-417-9697
이 메 일 : leejm@aur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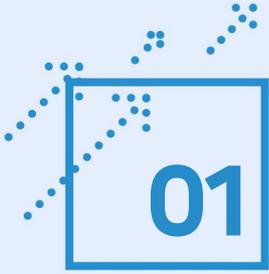
[안내]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'아우름 사이트(www.aurum.re.kr)'에 접속하면
건축·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Contents

01 ● 건축·도시 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

02 ●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

국토교통부
기획재정부
농림축산식품부
문화재청
문화체육관광부
보건복지부
해양수산부
행정안전부
환경부
법제처



건축·도시분야

10대 주요 정책테마

건축·도시공간과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해양수산부 등 10개 중앙부처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, 10대 주요 정책테마를 도출하여 요약·정리하였습니다.



건축·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

테마1 범죄예방 및 보행안전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행정안전부	• 치안관리 지역별 치안수요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내 상호 돌봄문화 조성 지원
	• 안전관리 강화 읍·면·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안전수준 제고
	• 안전한 통학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,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
	• 인파관리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중점관리지역인 전국 100곳으로 확대 적용

테마2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·사후관리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행정안전부	•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으로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 및 주민대피경보 자동 전파,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통한 국내외 사례 및 데이터 분석 기능 향상
	•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·정비,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,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 피해 예방, 침수취약도로 자동 차단·경보시설 설치
	• 재해영향평가 고도화 대규모·고밀도 개발 증가에 대응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·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해영향평가법 제정 추진
	• 사회재난 관리체계 개선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재개정을 통한 재난관리주관기관 책임성 제고
	•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나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신종유사 놀이시설(무인키즈풀 등)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
문화재청	• 문화재 피해저감 재난 예방·대응체계 구축 등 방재인프라 지속 확충, 자연재해 취약지역 사전 관리, 선제적·능동적 위기 대응으로 국가유산 피해 저감
해양수산부	• 해안가·항만 안전 강화 사고·재해 빈도가 높은 해안가·항만 등 지역 안전 강화
환경부	• 도심인프라 정비 도심도 빗물터널, 지하방수로 사업 착수, 하수관 키우기 사업 확대
	• 치수 대책 효과적인 홍수 방어를 위해 안전기준 상향, 홍수 취약 지구 조사·지정

[건축·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]

테마3

공간복지 및 삶의 질 향상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보건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령자 생활지원 고령자복지주택·노인복지주택·노인복지관 등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
환경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감·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없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 지원 확대

테마4

정주환경 개선 및 주거문화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국토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세대수·방설치 제한 폐지, 주차장 기준 완화, 발코니 설치 허용,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,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, 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, 구입 부담 경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건축·재개발 안전진단 등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,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, 공사비 갈등 완화 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사업 가능 지역 확대,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,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
기획재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소멸 위기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관광 활성화 불법 주거 전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 유도,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기재부·국토부·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·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
보건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구조변화 대응 식사·청소·목욕 등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주택 도입
행정안전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감소지역 정착환경 조성 빈집을 정비하여 공유사무실·공원 등으로 활용,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주택 신규 취득(세컨드 홈) 시 세부담 완화

건축·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

테마5 기후변화 대응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환경부	• 탄소중립 이행 탄소배출 감축 기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
	• 녹색투자를 통한 지역 활성화 오염지역 지역발전 선도모델화, 서천 구 장항제련소 주변부지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, 김포 거물대리 주물공장 일대 오염정화
	• 환경규제 혁신 대기오염 총량제 유연성 제고, 환경영향 차등 평가,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 평가, 재난 대응사업 평가 제외 등 규제 완화
기획재정부	• 무탄소 확산·저탄소 전환 가속화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
문화재청	•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('23.7.)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
	• 탄소흡수원 확충 문화유산·자연유산 보호공간 확대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, 도심 속 문화유산 탄소저장량·흡수량 조사

테마6 미래 건축·도시공간 선도 및 규제 혁신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법제처	• AI 활용 법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
	• 데이터 공유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하여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
농림축산식품부	• 수직농장 성장 일정 지역 내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,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('24.12.) 수립
	• ICT 활용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확대 스마트 교통모델을 활용한 중심지·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
환경부	• 데이터·AI 기반 환경관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환경정책 결정 지원
행정안전부	•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위험요인 예측 서비스 개발

[건축·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]

테마7 중소도시 활성화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국토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('24.下)하고,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('25),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, 용도지역 변경·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 및 사업성 개선 • 이주대책·지원조직 마련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선 조성,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, LH·HUG·LX·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·주민 지원
기획재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지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·농지·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• 방문인구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기반 확충,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·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활용·연계하여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추진 지원
행정안전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외지역 발전 지원 접경지역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, 외곽섬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 등 맞춤 지원 •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등 특례 추가 발굴 • 지역 맞춤형 통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통계, (가칭)지역 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 개발·제공 • 균형발전 17개 시·도 권역별 특성,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• 공유재산 활용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분석·진단을 통해 지방 누락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사용 도모
문화체육관광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광인구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, 지정·승인 권한 지자체 이양 • 지역 문화인프라 규제완화 공립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
중소벤처기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권육성 지역상권기획자 육성, 상권주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
법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치법제 역량강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~2027) 이행 지원
교육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지원 인구소멸지역 등에는 학교복합시설사업 총사업비 50% 일괄 지원

건축·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

테마8

농·어촌 지역 특성화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농림축산식품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빈집활용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,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,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,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부인구·자본 유입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,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시민의 수요 충족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,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
기획재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광활성화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
해양수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촌·도서 주민의 안정적 삶 지원 어촌 소멸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촌·연안 활력 종합대책 수립,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등 민간투자 연계 경제·생활 인프라 신규 조성

테마9

역사·문화적 건축·도시공간 가치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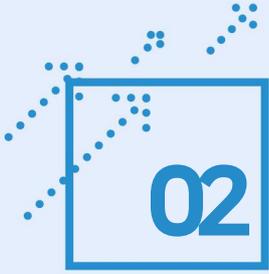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문화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체제 출범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에 따른 법제 및 조직개편, 국가유산 미래비전 발표를 토대로 정책 발굴·수립, 국보 승격 등 유형별 국가유산 지정·등록 확대 추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보호체계 구축 매장유산 민간 조사비용 지원 확대, 보존조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, 국가 주도 전국토 정밀 지표조사 실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, 관광자원으로 활용
문화체육관광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문화자생력 강화 노후 산업단지·폐산업시설 문화공간화 지원, 옛 경복도청·옛 충남도청 활용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

[건축·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]

테마10

역사·문화적 가치발굴을 위한 공간관리체계 마련

중앙부처	주요 정책과제
문화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산업 육성 국가유산산업육성법 제정 추진, 국가유산 산업조사 국가승인통계 실시 등 산업 활성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주환경 개선 주민거주 국가유산 지역 경관 개선사업 지원 등 국가유산 보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
국가보훈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상징공간 마련 서울현충원 재창조,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용산 호국보훈공간 서울현충원-전쟁기념관-광화문 상징공간 조성, 지역별 국가상징공간 조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훈공간 조성 미주지역 독립운동 본거지였던 LA 흥사단 건물 리모델링, 독립운동사적지와 연계하여 독립운동 벨트 조성



건축·도시분야

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

아래의 중앙부처 업무계획 중 건축·도시 관련 세부계획 중심으로 요약·정리하여 제공합니다.

국토교통부
기획재정부
농림축산식품부
문화재청
문화체육관광부
보건복지부
해양수산부
행정안전부
환경부
법제처

업무추진 방향

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

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주요
성과

- 해당사항 없음

보완
사항

-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, 임대 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
- 1-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도 정상화될 필요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■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재건축·재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패스트트랙 도입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,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• 안전진단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,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•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,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수립)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• 노후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/3에서 60%로 완화하고, 노후도 외 요건(접도율, 밀도 등)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• 정비구역 요건 완화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,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·동의 요건 등 개선 • 공사비 갈등 완화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
노후계획도시 재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('24. 下)하고,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('25)

[주요 업무계획] 국토교통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규제완화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, 용도지역 변경·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, 사업성 개선(특별법 제정 완료) • 사업시행 지원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방식(조합 또는 신탁)을 선택하고,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 지원('25) • 이주대책·지원조직 마련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先 조성,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,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, LH·HUG·LX·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·주민 지원
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지 확대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, 노후도 요건 완화로 사업대상지 확대 • 공공참여 확대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 보완, '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 • 절차 간소화 조합설립 주민 동의를 완화(80→75%)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(교통·경관심의 등)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
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후요건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(30년 이상 건물 비율)을 현행 2/3에서 50%로 완화하여 사업추진 확대 • 지구지정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,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 • 공공지원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,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 구축

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도시·건축규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(現 300세대 미만) 폐지 • 방설치 제한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•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• 입지규제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(주택 100%)으로도 건축 허용 •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

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공공주택 공급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→공공 전환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추가 공급 •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회복 건인 • 공급속도 제고 LH 공급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
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택지 발굴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'24년 신규택지 2만호 발굴 추진, 토지이용 효율화로 '24년부터 3만호 이상 물량 확충

건설산업 활력 회복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지방사업 여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• 인구감소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,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업무추진 방향

자유, 공정, 혁신, 연대

목표

활력있는 민생경제

- ① 민생경제 회복
- ② 잠재위험 관리
- ③ 역동경제 구현
- ④ 미래세대 동행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- 신규 정책**
- 지역경제·건설 투자 활성화
 -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

- 지속 정책**
- 물가·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지원
 - 규제혁신을 통한 관광·공유숙박 활성화
 - 부동산시장 연착륙
 - 인구·기후위기 대응

대내외 정책여건

구분	내용
경기 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외 거시여건은 소폭 개선 예상되나 구조적 리스크 확대 • 대내 회복세 확대되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 어려움 예상
부동산시장 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최근 거래 또한 감소 추세
민생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가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되면서 상반기 중심 고물가 부담 지속 • 고용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전망
구조적 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구조 변화 역동성·성장잠재력 저하, 인구·기후위기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■ 민생경제 회복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물가·서민생활 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.5만호 이상 공급 • 주택유형 다양화 청년·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·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분양가·임대료 인하 유도
내수·수출 회복 가속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국인 관광 활성화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,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 • 공유숙박 활성화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* 등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※ 지역 확대(5개도 → 전국), 대상 확대(50→500채), 증축 제한 완화 등
지역경제·건설 투자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광역권 특화발전 4+3* 초광역권 발전계획('23.10)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('24.3) ※ 4대 초광역권(충청, 광주·전남, 대구·경북, 부울경), 3대 특별자치권(강원, 전북, 제주) • 생활인구 확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·거래 인센티브 확대 • 방문인구 확대 미니 관광단지 신설(기존 50만㎡ 이상 → 신설 5~30만㎡), 지정·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 • 정주인구 확대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,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('24.上) • 공공부문 주택공급 활성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 가속화 • 민간부문 주택공급 애로해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, 공사비 분쟁 완화, 공급규제 완화 등 민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

■ 잠재위험 관리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부동산 PF 연착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 시장 정상화 '24년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관련 후속 조치(시행령 개정 등)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

■ 역동경제 구현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혁신 생태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지규제 개발제한구역·농지·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개발제한구역) 지역(비수도권 한정)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② (농지) 소멸 고위험 지역에 ^(가칭)자율규제혁신지구(농촌형 기회 발전 특구)를 도입하고,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 추진 ③ (산지)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, 국민 편익·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하여 산지 이용 확대

■ 미래세대 동행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인구·기후 위기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버타운 기재부·국토부·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·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('24.上) • 저탄소 전환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마련('24년)하고,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

주요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

업무추진 방향

농업·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
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토대로 적극적·공세적 정책 추진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신규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 세대 육성 •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 •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 	지속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농업 확산 •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•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동물의료체계 개선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

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주요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혁신 가속화 •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및 농지규제 합리화 	보완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람·자본 유입을 위한 혁신 필요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

대내외 정책여건

구분	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첨단기술 활용 확산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과 타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등 취·창업이 증가, 도시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도 확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장치 확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촌인구 감소·고령화 및 지역·산업간 격차에 따른 농촌지역 성장동력 약화 등 소멸 이슈 심화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ICT, AI 등 디지털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직농장 성장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설치 가능(농지법 시행령 개정)하도록 정비하고, 산업단지에도 입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
청년 세대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 지원 확대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, 임차임대, 선임대-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 확대

■ 농가 소득·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튼튼한 식량안보 체계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업생산기반 관리 강화 홍수 등 피해 대비 저수지 퇴적토사 준설 등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 • ICT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·경보 시스템 및 원격조작 장비 설치

■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·생태 기능 강화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·저탄소 영농 확대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 •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·농촌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 영농형태양광 실증 착수 및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4개소 추가 조성(누적 12개소)

■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, 일하고, 쉬는 공간으로 전환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농촌경제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부 인구·자본 유입 확대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,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*,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※ 지역 확대(5개도 → 전국), 대상 확대(50→500채) 영업일 수 제한(300일) 폐지 등 • 세제 특례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및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 • 규제 완화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,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의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

[주요 업무계획]

농림축산식품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화 농촌 미래상,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, 「농촌공간재구조화법」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• 농촌협약제도 추진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지속 확대,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 • ICT 등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, 스마트 교통모형을 활용한 중심지·배후 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

■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동물복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 지자체 보호센터 확충(신규 11개소) 및 민간 보호시설 입지·환경 개선 ※ 입지이전·재건축·환경개선 지원예산 증액, 시설개선 컨설팅 지원(30개소)

업무추진 방향
목표

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

혁신·미래, 보존·전승, 포용·상생

- ① 60여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출범
- ②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요구 증대
- ③ 급속한 정책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국가유산 보호체계 강화
- ④ 급증하는 국가유산 향유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증진
- ⑤ 국격에 걸맞은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기대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<p>신규 정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 • 국가유산 보호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 	<p>지속 정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장 •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혁신 •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•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 역량 강화
---	--

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<p>주요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틀 마련 • 보존지역 규제범위 및 규제강도의 합리적 조정으로 보존과 개발 간 균형 추구 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최초 마련 • 세계유산 영향평가(HIA) 국내 도입기반 마련 	<p>보완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국가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지속 발생 •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, 지역소멸 가속화, 일상화된 기후변화, 반달리즘 등 국가유산 보존·전승 위기 직면
---	---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■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국가유산 체제 출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제·조직 개편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일에 맞춰 국가유산 체제 관련 법령 정비 완료 및 국가유산청 출범 • 미래비전 정책 발굴 국가유산 미래비전('23. 12. 발표)을 토대로 국민의 편익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·수립
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정·등록 확대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보 승격 등 유형별 국가유산 지정·등록 확대 추진 • 보존·복원 세계유산, 국가지정·등록유산, 궁능 등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따른 보수·복원 추진 • 역사문화권 조사·연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규명하고, 향후 정비사업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권별 중요유적 발굴조사 추진

■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국가유산 보호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향진단 도입 규제 간소화를 위해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등 영향진단 도입 법적·제도적 기반 조성 • 규제범위·강도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 재조정 지속 추진, 기 허용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통한 규제강도 완화지역 확대 • 국가유산 경관 개선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·상생을 위해 노후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거주 국가유산 지역 경관 개선사업 신규 지원 • 민속마을 정주여건 개선 국가민속마을 내 생활기반시설(통신, 상하수도, 가스배관망 등) 정비 지원 등 거주민 주거생활 편의 도모
차별없이 누리는 국가유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적 기반 확대 권역별 관람환경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 • 궁능 관람환경 개선 보행약자를 위한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 등 시설물 관람환경 개선·정비 사업 확대

■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 가치 확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국가유산 산업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제화 추진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27조 산업 육성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정책 제도를 위해 「(가칭)국가유산산업육성법」 제정 추진 • 국가유산 산업조사 국가승인통계인 국가유산 산업조사를 실시, 업종별 산업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관련 분야 정책수립 활용
지방소멸 위기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문화유산 활용 개성 넘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험, 답사, 공연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, 지역 관광 견인 • 역사문화도시 조성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된 고도(古都), 근대역사문화공간, 역사문화권 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명소로 탈바꿈
미래 국가유산 포괄적·선제적 보호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지정유산 보호기반 마련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(향토유산) 조사·목록화를 완료하고, 이를 토대로 관리·활용방안 마련 • 지역 관리기반 강화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시행('24. 11.)에 대비, 배치 기준 마련 및 전문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• 제도 확장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('24. 9.)에 맞춰 확장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•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가치있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미래가치 선제적 보호·활용
디지털 헤리티지 활성화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데이터 축적 과학적 보존·활용을 위해 지정유산 대상 3차원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 및 개별 분산된 원형기록정보 통합 DB 구축 • 데이터 활용 축적된 고품질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유산 보존, 복원, 향유,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확대

■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재해·재난 대비 관리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재인프라 구축 국가유산 현장 방재시설·방재인력 등 방재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신속한 재난 예방·대응체계 구축 • 사각지대 관리 강화 공능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견고한 방재시스템 구축,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선제적·능동적 위기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약지역 사전관리 산지, 계곡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• 유형별 예방·신속대응 풍수해, 흰개미 등 재해 유형별 선제적 방재를 강화하고, 피해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확대
탄소중립 실현 기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탄소흡수원 확충 문화·자연유산의 보호공간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가유산의 가치와 기능 제고

[주요 업무계획]

문화재청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형별 예방·신속대응 도심 속 4대궁·조선왕릉의 탄소저장량·흡수량 조사, 탄소중립 기여도 분석을 통해 국가유산의 탄소 저감 가치 홍보

■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유산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등재 추진 유네스코의 변화된 등재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유산, 인류무형유산,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쟁력 우위 선점 • 영향평가 제도 시행 세계유산의 영속적 보존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설계 및 시행(24.11.) • 통합관리체계 마련 시·도를 달리하는 연속유산의 효율적인 보존·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추진
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·활용 기반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수기반 강화 현지 조사·연구 확대, 유통시장 모니터링 강화, 해외 언론매체 대상 공개매입 적극 홍보 등 환수 전략 다각화 • 현지 보호·활용 국외문화유산 보존·복원 지원 및 전시 개최, 아카이브 DB 정보 공개 등 국내외 관심 제고 및 향유 기회 제공 • K-공유유산 시범사업 소재국과 역사·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K-공유유산을 대상으로 현지 보존·활용 협력사업 본격 추진

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

업무추진 방향
목표

문화로 행복한 사회, K-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

- ①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
- ②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
- ③ K-컬처 시대 선도하는 글로벌 新문화전략
- ④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
- ⑤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신규 정책	• 인공지능, 디지털 기술 선제적 대응	지속 정책	•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·지역문화 자생력 키우기 •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주요 성과	• 지역문화정책*, 대한민국 문화도시, 로컬 100 등 문화가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※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(‘23.3), 지방시대 종합계획-문화특구 포함(‘23.11) 발표	보완 사항	•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생산·유통·향유 생태계, 서울·부산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관광 등을 해소, 지역 자생적 발전 기반과 역량 제고 요구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

대내외 정책여건

구분	내용
• 3고(고환율·고물가·고금리) 위기, 국민 문화 생활 위축 및 수출-내수 괴리 극복 필요	• 고물가, 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은 문화소비 걸림돌로 작용, 국민의 문화소비 부담 경감하는 문화 민생 정책 추진 필요 •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 지속 전망, 국제관광 회복세 등 고려,

[주요 업무계획]

문화체육관광부

구분	내용
	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적 경제 기여 필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-컬처 시대, 세계를 뒤흔들 글로벌 문화전략 요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-드라마, K-팝 등 대중문화에 이어, K-클래식, 한국어, 한식 등으로 확장되면서 K-컬처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전략 요구 •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, 2024 파리하계올림픽·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스포츠행사는 문화교류와 우리 문화 확산의 호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인구·지역 위기, 혁신적·창의적 해법 요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절벽,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, 탄소중립 등 위기 심화, 혁신적·창의적 지역 전략 요구 • 지역·세대·소득 문화 격차 여전, 지역 자생적 문화활동 여력 미흡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심화 우려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■ 문화로 지역소멸, 고립감 등 사회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.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지역 문화 자생력 키우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고유 브랜드 강화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13개 도시 고유성·특화성 대표 사업 컨설팅 • 유휴시설 문화공간 재창조 노후 산업단지·폐산업시설 문화공간화 지원, 옛 경북도청·옛 충남도청 활용 문화복합공간 조성* 등 ※ 옛 경북도청 활용방안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, 옛 충남도청 본관동 리모델링해 국립미술품수장센터 건립 • 규제혁신 국립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 추진
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광인프라 조성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(기존 50만㎡→신설 5~30만㎡), 지정·승인 권한 기초지자체장 이양(시·도지사→시장·군수) • 관광유도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조건 우대,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 확대, 숙박·식음·관광·체험 등 할인혜택 제공

주요 업무계획 보건복지부

업무추진 방향

목표

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

- ① 의료개혁 본격 추진
- ② 약자복지 강화
-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신규
정책

-

지속
정책

- 두터운 약자 보호·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
- 국민돌봄 통합지원

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주요
성과

-

보완
사항

-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 여전히 지적, 지역·필수 의료 위기는 더욱 심각

대내외 정책여건

구분	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물가, 저성장 등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분배는 개선 추세,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, 필수 의료 붕괴 가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령화, 건강 관심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하나 인력공급 부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저출산 지속, 노인 증가로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령화에 따른 연금·의료비 증가로 향후 복지지출 급증 전망, 1인 가구 비중·연령이 빠르게 상승, 이에 따라 돌봄 수요 또한 확대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■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“약자복지 2.0”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망 형성 지역주민 간 연결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마련

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“간병·돌봄 확충”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국민돌봄 통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 포괄서비스 식사·청소·목욕 등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주택 도입 • 건강생활지원 고령자 복지주택, 노인복지주택, 노인복지관 등 활용한 식사, 여가,건강 등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고령자 복지주택) 국토부 공급 확대(연 3천호), 복지부·국토부 협업 통한 서비스 확대 (노인복지주택) 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분양형 허용 추진 (노인복지관) 미설치 시군구(34개) 대상 설치 확대, 경로식당 운영 지원 등 추진

주요 업무계획 해양수산부

업무추진 방향

민생 안정, 역동 경제, 균형 발전

목표

- ①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
- ②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
- ③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신규
정책

-

지속
정책

- 어촌 정주여건 개선
- 사고·재해 없는 바다 구현
- 권역별 레저거점,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활력 제고

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주요
성과

-

보완
사항

- 어촌 인프라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, 어촌소멸 지속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어업인, 어촌·섬 주민의 생활 안정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어촌·도서 주민의 안정적 삶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촌·연안 활력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어촌·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, 여항 배후부지 쇼핑센터, 음식점 등 민간개발 허용 법적근거 마련('24) • 인프라 신규 조성 민간투자연계, 100개 어촌에 경제·생활인프라 신규 조성(65개 설계, 35개 선정), 어촌 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• 도서지역 교통권 확대 교통소외도서 여객 지원 확대

■ 깨끗하고, 재해·사고 없는 바다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재해·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고·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 안전 강화 연안재해 근본적 저감을 위해 국민안심해안* 20개소 신규 지정 추진,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항만 재해 예방 인프라 보강*, 방파제 등 사고 발생이 잦은 구역에 안전 표지판·표지선 의무 설치 ※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해안가 지역을 국가가 매입 → 완충공간으로 조성 ※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, 방호벽 설치 등 침수 취약지구 정비(39개항 65개소)

■ 해양 레저·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해양레저 기능 통합, 대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양관광 기반정비 10여개로 분산된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('24) • 권역별 대형 프로젝트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착수, 부산·경남·전남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,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

주요 업무계획 행정안전부

업무추진 방향

목표

- ① 임기 반환점을 맞는 해로, 국정과제 핵심성과를 다수 창출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'윤석열 정부 개혁적 변화' 체감 필요
- ② 행정안전부는 중앙-지방의 가교이자 정부 전체의 행정체계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핵심 플랫폼 기관으로서, 복합적인 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개혁 선도

안전한 일상, 역동적인 지방,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신규 정책

-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

지속 정책

- 지방시대 본격 개막에 따른 지역 주도의 성장 발판 마련
-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
- 일상 속 안전 강화
- 재난피해 지원 현실화
- 발전적 과거사 문제 해결

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주요 성과

- 기존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방식에서 탈피, 지역의 자율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 주도 성장의 발판 마련
- 기후 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, 65개 세부과제 총실 이행

보완 사항

-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, 지역 여건에 따라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대전환 필요
-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, 예상치 못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측·대비 및 대응역량도 시급히 보강할 필요

주요 업무계획 행정안전부

대내외 정책여건

구분	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 자연 감소 속에서 수도권 쏠림현상 더욱 심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제 불확실성 증가,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운용 여건은 '24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못지않게, 지역별 비교 우위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 필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물가·고금리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, 신종 사회재난 우려 확산 및 이상기후 일상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자 지원,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전 확보 등 국민이 중시하는 정부의 기본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산망 장애 및 이용격차 등 우려도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빈틈없는 디지털 환경 구축과 함께, 디지털 약자 등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필요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균형 있는 국토 활용 17개 시도 및 권역별 특성,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전국도의 잠재성장동력 현실화 소외지역 발전 지원 접경지역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(소양호수권역, 유네스코 지질자원권역 등), 외곽섬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* 등 맞춤 지원 ※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, 교통시설 및 수도·전기 공급시설 우선 지원 등
매력적인 지역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착 환경 조성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·공원 등으로 활용,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신규 취득(세컨드 홈) 시 세부담 완화 특례
지역 고유성 활용 토대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역 간의 검토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하여 「인구감소지역법」 개정 지역 통계 다변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* 통계, (가치)지역 특성 MBTI* 등 맞춤형 통계자료 개발·제공 ※ ('23년) 7개 지자체 시범 산정 → ('24년) 숲 인구감소지역 대상 산정 ※ 인구, 입지, 지역가치,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, 16개 유형으로 지역 분류
건전한 지방재정 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유재산 적극 활용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분석·진단을 통해 누락재산 발굴 및 유희재산의 적극적인 사용 도모

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---------	------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데이터분석과 AI를 통한 위험징후 조기 파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I 관제로 신속 대응 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 신속 포착·통보 • 빈틈없는 인파관리 인파관리지원시스템*을 모든 중점관리지역에 확대 적용 ※ 인구 밀집도 및 공간 특성(협소도로 비율 등)을 통해 위험도 분석, 관계기관 상황전파 • 침수위험 조기 파악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 및 주민대피경보 자동 전파 • 생활 속 위험요인 예측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데이터(텍스트, 사진 등)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 개발 • 잠재재난 분석 강화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(現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확대 개편)를 통해 국내·외 사례 및 데이터 분석기능 향상
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정보 통합제공 개별 시스템* 6종 별로 제공되던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'안전24'로 통합하여 위치 기반 원스톱서비스 제공 ※ 국민재난안전포털, 생활안전지도,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등 • 재난상황 통합관리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(28종)을 '재난관리24' 포털로 연계해 디지털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
주민대피체계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대피시설 통합 운영 재난·민방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 혼선 방지 및 빠른 대피 유도
위험지역 인프라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험사면 관리 강화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·정비,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(산림청 협업),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피해 예방 •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시설별 담당자 지정, 15cm 침수 시 전면 통제 의무화,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 • 침수취약도로 선제 관리 자동 차단·경보시설 조기 설치
자연재난 대비체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풍수해 예방기준 개선 이상 기후를 고려해 농식품·국토부·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연구를 통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
일상안전교육 대폭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험시설 확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·보급
안전한 생활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나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신종유사놀이시설(무인키즈풀 등)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•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(보도) 확보 및 AI 스마트 횡단보도(어린이 인식, 보행신호 자동 연장) 설치 확대(매년 100개소)
주민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율방재단 활동 확대 자연재난에 한정된 자율방재단 활동영역을 사회재난까지 확대, 감염병 방역,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에 적극 참여 • 안전신고 주민이 참여하는 계절·지역별 집중신고제(안전신문고 활용)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인 발굴 및 사전 예방조치 강화

[주요 업무계획 행정안전부]

■ 서민·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재난피해자 현장형 지원책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재민 주거 개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급형태 다양화, 공급방식 변경(지자체 제작·공급 → 임차 후 공급)을 통한 신속 지원 • 신속한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

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·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안전수준 제고 •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관리 지역별 치안수요의 특성을 반영해 민·관 협업으로 지역사회 내 상호 돌봄문화 조성 지원
발전적 과거사 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유공간 조성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('24년)해 민주화운동 기록수립·보존 및 민주주의 연구, 시민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

업무추진 방향

- ① 안전한 환경관리, 든든한 민생
- ② 무탄소 녹색성장, 단단한 경제
- ③ 촘촘한 환경복지, 따뜻한 사회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신규 정책	지속 정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녹색투자가 이끄는 지역 활성화 • 민감·취약계층 집중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프라 정비·안전관리를 통한 치수대책 •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 및 감축 지원 •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

대내외 정책여건

구분	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갈수록 강해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가 국민 안전 위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하천제방 월류 유실로 인명 재산 피해 • 극심한 가뭄 신도시 산단개발 등 물수요 증가 • 21세기 후반 극한 강수량 증가 지역 계절간 강수편차 심화 예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미세먼지, 화학제품 등 생활 속 환경 위해에 대한 국민 불안 지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온 상승 종식 등으로 초미세먼지 악화 우려 • 생활화학제품 소비증가 구입경로 다양화 등으로 국민 관심 증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연 향유,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 여가 수요 증가 중이나, 자연혜택 이용 정책은 다소 미흡 • 전시동물 복지개선 여론, 야생동물 피해사례 증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원공급망 위협 확대, 순환경제는 국제 흐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너지와 함께 광물자원(희토류, 리튬, 코발트 등)도 자원무기화 우려 • 재생플라스틱 재생금속 바이오연료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■ 안전한 환경관리, 든든한 민생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치수대책 전환 원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프라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(강남, 광화문) 지하방수로(도림천) 사업착수, 하수관 키우기 사업 확대,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, 국가하천 수위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국가가 직접 정비, 하천 준설 본격 확대, 신규 댐 건설 등 • 안전관리 효과적 홍수 방어를 위해 제방 등 주요시설 중심 안전기준 상향, 홍수 취약 지구 재조사·지정
초미세먼지 배출 관리·감축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확대

■ 무탄소 녹색성장, 단단한 경제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도정비 감축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 토록 배출권거래제 개선
녹색투자가 이끄는 지역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재생 서천 구 장항제련소 주변부지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, 김포 거물대리(주물공장 일대) 오염정화, 수소·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오염되었던 지역을 주민건강·지역발전 선도 모델화 • 지역상생 수익분배, 지역채용, 관광명소로서 수상태양광 시설 확산

■ 촘촘한 환경복지, 따뜻한 사회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민감·취약계층 집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 환경안전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 확대 •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* + 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 및 확산* ※ 폭염·한파대응 쉼터(그늘막, 쿨링포그 등), 결빙취약지 개선 등('24, 95억원) ※ 단열·창호 개선(산업부),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(농림부) 등 관계부처 협업

주요 업무계획 법제처

업무추진 방향

- ① 전략적 입법 총괄·관리
- ②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
- ③ 지방시대 실현 지원
- ④ 법령서비스 혁신

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

신규 정책

-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른 법제 개선
-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현장 갈등 해결

지속 정책

-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
-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

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

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I 활용 법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 • 데이터 공유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하여 각 부처,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일괄 정비
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갈등 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 공무원, 정책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법령 실태 분석 실시,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법제 개선 추진 ※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정비

지방시대 실현 지원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자치법제 역량강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행 지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~2027) 이행에 필요한 조례 마련에 대해 종합 법제지원 제공, 지역별 특화 정책 신속 구현

■ 법령서비스 혁신

주요 정책과제	세부계획
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일상용어나 문장·질문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, 연내 대국민 공개 •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 조문, 입법 배경 및 취지, 판례·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·요약하여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

건축도시 정책동향

건축·도시정책정보센터

건축·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 자료와 정책 정보 및 학술 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,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
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 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, 건축 정책수립을 지원하고,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·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
건축공간연구원
Architecture & Urban Research Institute

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, KT&G세종타워B 8층,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
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,
KT&G Sejong Tower B 8F, Gareum-ro, Sejong-si, 30116, Korea